이슈분석

노사관계 2003년 평가와 2004년 전망

이주희*

Ⅰ. 2003년 노사관계의 전개 및 평가

◈ 노사관계 정책 개관

○ 집권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정책기조로 발표
-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중시
- 연초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노조와의 4. 20 노정합의, 조흥은행 파업 당시까지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

○ 2003년 후반기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의 마련에 중점
- 상반기 노정갈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정부는 아직 미흡한 노동기본권의 증진과 과보호되고 있다고 여기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조에 대한 제어 및 노동유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추진
- 한편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상정을 계기로 시작된 6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와 구속을 실시하면서 초반과는 반대되는 강경대응으로 선회

○ 사회적 협의 활성화 미흡
- 특히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중층의 협의 및 교섭구조의 활성화를 통하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lee@kli.re.kr).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한 초기의 목표는 노동계의 주요 세력인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의 부진과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기업별 교섭의 전통 속에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철폐보다 국민소득 2만달러 획득이라는 경제목표가 국정과제로 더 부상되기 시작

○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조율기능의 부족

- 정부 내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정책채택과 네덜란드식 사회적 협의체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조율기능이 부진

◈ 주요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갈등

○ 주 5일 근무제 법제화

-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합의사항 중 하나로 5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연월차휴가의 합산 및 축소조정(15~2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3개월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노동할증률 25% 적용, 생리휴가의 무급화, 사업장 규모별로 7년간 단계적 실시, 부칙에 명시한 포괄적 임금보전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노사의 합의 없이 금속노조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되어 정부안 중심으로 법제화가 된 만큼 단계적 실시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향후 기업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비정규직 보호방안 법제화 무산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5월 23일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된 공익위원안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의 경우 일정기간(2년) 동안의 사용은 허가하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불허하고, 파견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등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허용업종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 손해배상 및 가압류제도에 대한 노동계 반발
- 1월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및 10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김주익) 자살 등 대표적 장기투쟁사업장에서 계속되는 노동계의 자살 및 분신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도 개선과제가 현안으로 등장
- 노동계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한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배 및 가압류를 노동조합 탄압과 활동제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는 손배·가압류제도의 개선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

○ 공무원 노조법 제정 유보
-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협약체결권)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 2권에 대한 허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나
- 현재 법외노조의 형태로 존재하는 두 공무원 단체 중 특히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유보,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
-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4년 8월부터 시행 예정
- 따라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 제도가 당분간 병행 실시될 예정임.

○ 퇴직연금제 법안 통과 유보
-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퇴직금제의 전사업장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 의견대립
-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11월 초 완성
- 근로자의 단결권이 확대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이 합리화되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단체협약 및 교섭제도가 합리화

되었고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가 제한되고 조정전치주의를 폐지, 간이조정(알선)제도의 신설 등 실질적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 부당해고 및 체불인금 구제제도를 효율화하고 사업양도·양수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 및 노사관계 규율체계를 정립하였음.
- 그러나 이 내용을 둘러싼 노사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

◈ 교섭구조의 변화 : 산별교섭의 진전과 비정규직 조직화

○ 금속

- 금속산업 중앙교섭은 사용자측의 제안으로 시작, 기본협약 자동연장, 주 5일 근무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금속노조 조합활동 보장 등 5대 핵심요구에 대한 노사간 합의에 성공
- 특히 기본임금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에 따라 2003년 단협 갱신사업장은 10월 1일부터, 2004년 단협 갱신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음. 100개 중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금속노사의 주 5일제 합의는 관련 정부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 그러나 현격한 사업장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교섭과 지부별 집단교섭, 사업장별 대각선교섭이 혼재, 파업과 갈등이 격화되었고 중앙교섭 합의내용과 기존 사업장 단협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노출되었음.

○ 금융

- 31개 사업장 사용자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및 교섭위원 선정권을 위임하여 산별 최초의 중앙교섭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나, 실제 교섭시에는 노조측의 요구로 사업장 대표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산별중앙교섭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음.
- 2003년 금융산업 임단협의 주요 과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로, 실질적인 대안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비정규직 확산을 자제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공동합의문 채택
- 그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주 5일 근무제 법제화에 대비한 기존 협약의 정비, 고용안정 및 경영참가, 기업연금제의 도입 등을 단협에서 논의. 특히 남녀기회균등부여, 직장보육시설 등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

- 사무금융연맹 소속 증권사노조도 증권업협회가 사용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산별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증권업협회의 거부로 산별 교섭은 무산되었음. 그러나 증권노조의 조직력과 대표성이 강화되었으며 협회와 증권산업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가 최대한 반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

○ 병원

- 2002년 장기파업을 겪었던 병원 노사는 2003년 정부의 직권중재 일방회부 불가방침 유지에 힘입어 사용자의 성실교섭과 노사의 자율타결로 파업이 최소화
- 보건의료노조는 6월 10일 45개 병원이 합의한 노사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산별교섭 추진의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합의하고 2004년부터 산별교섭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
- 그 외에도 단체교섭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주요 요구안에 합의
- 병원협회도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점차 확장하는 추세이며 개별 병원에서도 공동성명서 채택 이후 산별 교섭에 대한 대비를 고려하기 시작

○ 하청기업 비정규직 조직화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3월 28일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제조업 내 하청기업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 고조
-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면서 정규직 기업별 노조 위주로 굳어진 교섭구조에 균열이 발생, 산별 조직화의 필요성 강화

◈ 임단협 주요 쟁점

○ 임금교섭은 상반기 전년동기에 비하여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9월 임금교섭 타결이 급증하여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전년보다 약간 빠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협약임금 인상률은 11월 말 현재 통상임금기준 전년의 6.6%보다 0.2%낮은 6.4%를 기록

- 민간부문은 전년에 비해 0.3%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약 1.1% 정도 상승
- 경기침체와 일부 수출산업의 호조로 인해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전망

<표 1> 2003년 임금교섭 타결현황(11월 30일 현재)

(단위 : 개소, %)

	지도대상 (A)	타결 (B)	진도율 (B/A×100)	협약인상률	
				임금총액기준	통상임금기준
전 체	5,751 (5,401)	4,958 (4,655)	86.2 (86.2)	6.5 (6.8)	6.4 (6.6)
민간부문	5,575 (5,236)	4,856 (4,556)	87.1 (87.0)	6.5 (6.9)	6.4 (6.7)
공공부문	176 (165)	102 (99)	58.0 (60.0)	5.6 (5.3)	6.5 (5.5)

주 : 1)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
2) ( )안은 전년동기.

○ 그러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저조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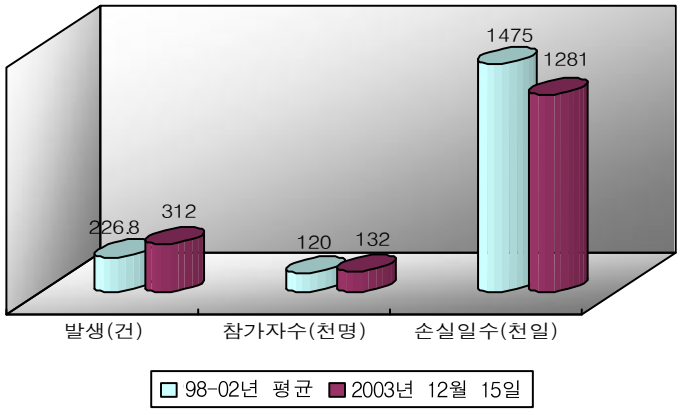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 임단협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임.

○ 현대자동차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문제가 부상
- 신기술 도입과 신차종 개발, 사업확장 및 공장이전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는 현대차 단협 내용이 2003년 구체화되면서 경영계와 언론의 노동조합 경영참여 요구에 대한 비판이 고조
- 보다 영향력 있는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노사간 의견 격차가 확대

◈ 노사분규 증가 및 성격변화

○ 노사분규 현황 비교: 2003년 12월 15일 현재 1998~2002년의 연평균 분규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312건의 분규수 기록
- 그에 비해 분규손실일수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분규가 빨리 타결되었음을 암시

[그림 1] 노사분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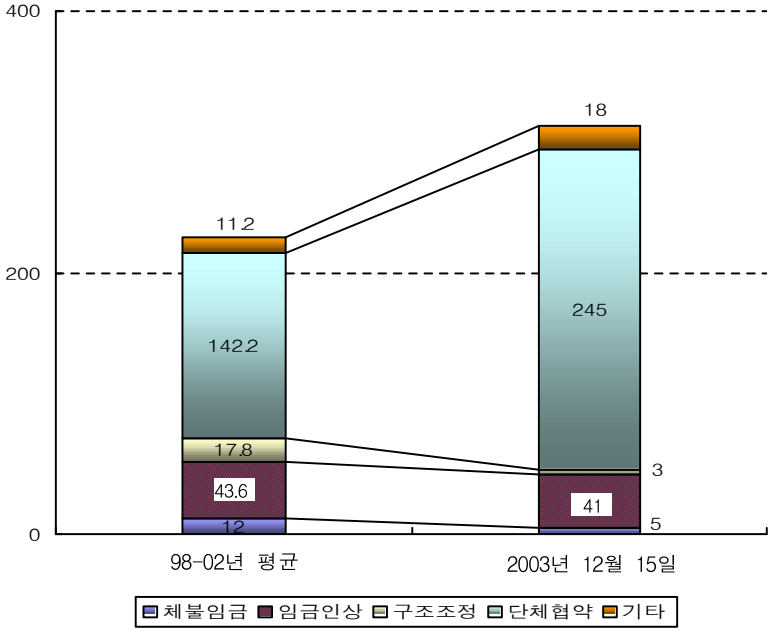


주 : 2003년은 1～12월 누계치임.

○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 비교

– 체불임금이나 구조조정 관련 분규수는 급감하였으나 단체협약을 둘러싼 분규수는 급증

[그림 2]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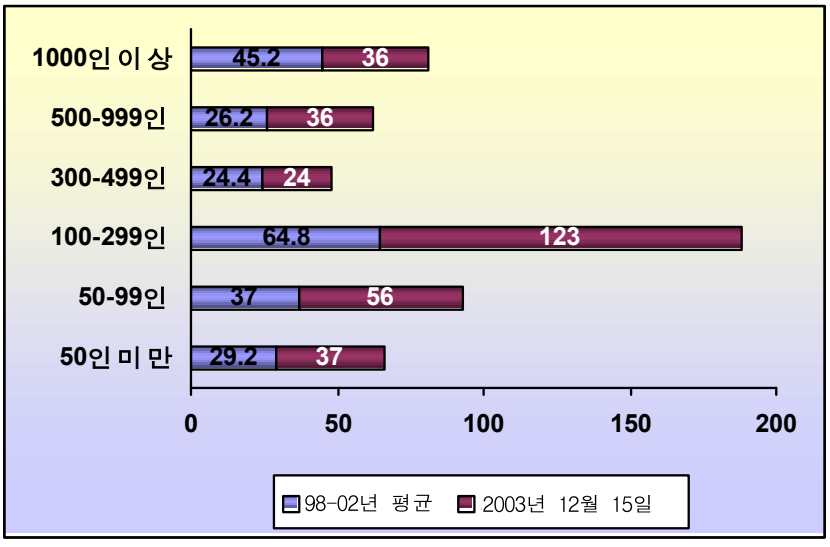
주 : 2003년은 1～12월 누계치임.

○ 규모별 노사분규 현황 비교

– 특히 50에서 99인, 100인부터 299인 사이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분규수가 크게 급증한 데에는 7월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다수의 중소규모 금속 사업장에서 산별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기 때문

–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분규 수는 오히려 감소

[그림 3] 규모별 노사분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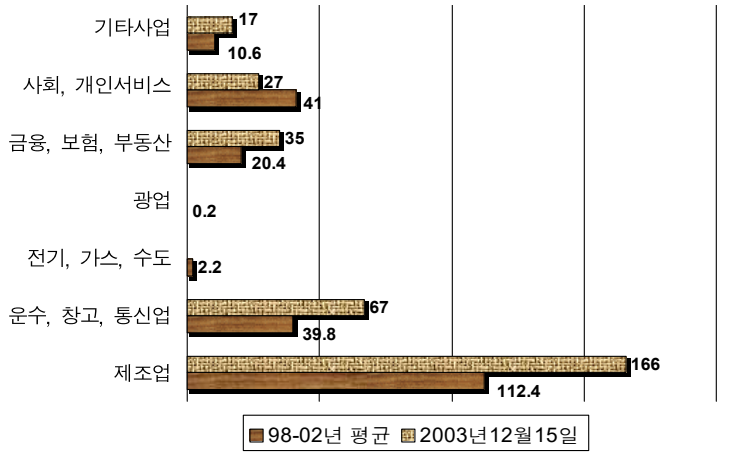


주 : 2003년은 1~12월 누계치임.

○ 업종별 노사분규 현황 비교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에서의 분규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 개인서비스 업종에서의 분규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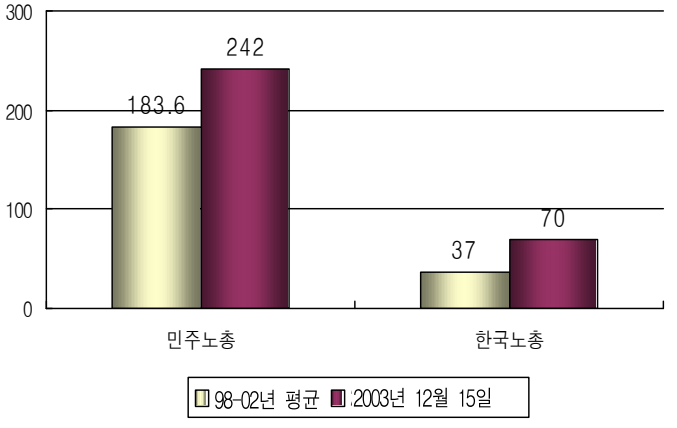
[그림 4] 업종별 노사분규 현황 비교



주 : 2003년은 1～12월 누계치임.

○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한 분규수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한 분규수를 크게 상회하는 추세는 과거와 유사

[그림 5] 상급단체별 노사분규 현황 비교



주 : 2003년은 1～12월 누계치임.

○ 2003년 월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 7월에 138건으로 총발생건수의 거의 반수를 육박, 이것 역시 금속노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 발생을 반영하는 통계치

- 그와는 대조적으로 1월~6월의 기간동안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낮은 수의 노사분규가 발생

○ 불법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손배·가압류 증가 추이
- 불법 노사분규 비율은 2002년까지의 추세에 비해 크게 감소한 8.3%에 불과
- 2003년의 경우 손배·가압류의 발생건수 및 금액이 2002년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
- 그러나 2000년 이후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702억 1백만원, 가압류 총 1,328억 9천 8백만원이 제기되어 점차 노사 및 노정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부상

<표 2> 불법 노사분규 발생 추이 및 관련 통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불법 노사분규 비율[1]	43	48	27	23	20	8.3
구속 근로자수	219	129	97	221	200	97[3]
공권력 투입건수	10	1	6	4	2	1
손해배상 청구액[2]	-	-	19,043 (20)	20,994 (20)	12,769 (17)	11,312 (15)
가압류 청구액[2]	-	-	20,497 (12)	32,892 (14)	55,394 (21)	14,850 (17)

주 : 1) 총노사분규 건수 중에서 불법 노사분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2003년은 11월 30일 기준.
2) ( )안은 해당업체 수, 청구액의 단위는 백만원, 2003년은 11월 15일 기준.
3)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 근로자수 : 85명.

Ⅱ. 2004년 노사관계 전망

◈ 정치경제적 배경

○ 연초 노사단체들의 선거,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력과 2004년 노사관계 전개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 1월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결과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 및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정국 운영 주도권 확보 여부가 역시 크게 영향받을 것이며, 총선 이전까지 주요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부진하리라 예상됨.

○ 경제성장률 4.5~5.5% 예상, 실업률은 소폭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03년의 2.8%에 비하여 2004년에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파급효과, 국제유가의 안정이 기대되면서 4.5~5.5%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원화 가치의 상승 및 원/달러 환율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는 약간 둔화될 것
- 국제유가의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저기 소비재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2.9%대로 안정되리라 예상됨.
- 경제성장이 예상대로 유지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61.9%, 실업률은 3.2%선으로 추정.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고용시장 여건의 일부 나아지리라 기대되지만, 신규인력 수요 미약, 청년층 실업, 비정규직 확산 등의 영향으로 큰 개선은 어려움.

◈ 법·제도개선 쟁점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

- 정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최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추진 예정
- 노사정위에서의 논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요청되나 불확실한 상태임. 노동계에서는 합의 없는 정부 단독 입법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제도 선진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위는 물론, 활용가능한 다양한 노사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대화와 설득, 조율을 해나아갈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보호방안

- 2003년 합의에 실패한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2004년 계속될 것이나 노사 의견차가 매우 커 원만한 합의형성이 어려울 듯. 특히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추가논의가 요구됨.
- 경영계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상시적 활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 노동계는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안이 비정규노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 보호에 역

행하고 있다고 비판, 전면 재논의를 요구

- 정부는 공익안을 중심으로 노사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렴하여 합의점을 찾아보고, 유노조기업에 대해 임단협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홍보, 비정규직이 법안통과 지연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 동안 무분별한 확대와 고용조건 악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손배 및 가압류제도 개선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최저임금(혹은 최저생계비) 및 조합비 수입의 일정부분을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또 실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부문 손배 및 가압류 취하문제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은 지속
-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된 불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불법쟁의 자체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법원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 손실액 중심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임.

○ 공무원 기본권 및 퇴직연금제에 대한 입법은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큼.

-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대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 기본권 정부안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연맹(대한공노련)은 입법보류에 강력히 반발, 2004년에도 논란이 지속될 예정
- 퇴직연금제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퇴직금제 완전 폐지를 주장, 기존 노사의 반대와 더불어 법안처리가 어려운 형편임.

◈ 주요 산별교섭 쟁점

○ 금속

- 2003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참여요구 집중 예정
- 금속산별 단체교섭 구조의 이원화 준비 시작. 즉 교섭수준을 중앙교섭과 지부가 관장하는 사업장 교섭으로 이원화하고 중앙교섭에서 다룬 안건에 대한 보충교섭 차원에서 지부집단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경우 상부 협약과 하부 협약의 상호관계와 구속력 정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산별 중앙교섭의 실시주기와 사업장 단협의 교섭실시 시기와 주기에 대한 정비 및 사업장 단협체제의 통일도 필요해짐.

-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2004년 금속노조의 주요 교섭 이슈. 특히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조정 문제가 금속노조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완성차노조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가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 임금직급체제 개편에 대한 프로젝트 준비 중

○ 금융

-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과 역량 제고: 현재 금융노조 산하 11개 기관이 은행연합회의 비회원으로, 완전한 산별 중앙교섭을 위해서는 은행연합회가 교섭권을 위임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 사용자 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함.
- 교섭구조 정비 계속: 산별 협약은 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보충협약은 지부별 복지후생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산별협약-보충협약-노사협의회(중앙노사협의회구성 포함)의 관계 정립도 필요
- 산별 임금협약의 하한선 구속력 확보문제 등 지부별 임금수준 편차 극복방안 마련
- 2003년 미합의 주요 쟁점－정년연장, 조합재정자립기금마련, 비정규직 문제 등－이 2004년에도 단체협약의 주요 이슈가 될 것.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2003년도 합의사항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단협상의 차별철폐와 보호방안 논의를 본격화

○ 병원

-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부터 실질적 산별교섭 실시를 기대. 전체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 집단교섭요구와 병원협회에 대한 보조적 교섭요구를 병행할 예정. 산별 교섭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협약으로 구조의 이원화 고려 중
- 산별교섭방식과 더불어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싼 단협 개정이 산별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
- 4월 총선을 전후로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정치적 요구와 관련된 투쟁도 계획

○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시험적 시도가 진행되리라 예상됨.

◈ 임단협 전망

○ 임금은 대체로 2003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타결 전망

- 2004년의 경제성장률이 2003년의 2%대 보다 현저히 상승한 5%대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2003년 내수 부진으로 임금인상이 저조하였던 부문에서 노동계의 보상심리로 협약임금인상률이 2003년보다 조금 높아지리라 예상됨.

○ 2003년 단체교섭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한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가 지속될 것

○ 주 5일제 법제화와 관련된 단체협약에서의 조율을 둘러싸고 사업장 단위 노사갈등 증가 예상
- 특히 단체협약과 개정 근로기준법 중 유리한 내용을 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협 개정을 둘러싼 어려움이 예상됨.
- 주 5일제 법제화가 근로자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기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필수적임.

○ 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이해대변 노력 지속
- 2003년 임단협을 통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음. 상급단체에서는 산하 노조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조항과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지도할 예정

◈ 활발한 노동계 정치활동 예상

○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대비 활동
- 민노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

○ 한국노총은 사민당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에서는 노동계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노당과의 통합도 제안

◈ 정부의 과제

○ 정책의 일관성, 균형감각 강화, 정부 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
- 집권 초기 주요 정책기조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하위 목표들을 다시 설정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그릴 것
- 특히 정치적인 노정협력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및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원만한 해결과 도입을 위해 민주노총과의 대화채널 확보 및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손배·가압류 등 노동계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필요

○ 교섭구조 안정화
- 산별 조직화 및 산별교섭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주요 산업－금속, 금융, 보건의료－을 중심으로 중앙수준의 교섭과 하부교섭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교섭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업차원의 생산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노사협의의 활성화 및 올바른 경영참여 방안마련도 그 일환임.

○ 사업장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노사관계 개혁
- 산별 조직화에 따른 교섭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공장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교섭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 현대 자동차 등 대공장의 노사관계에 생산적 협조와 타협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교환 등 기업 내 고용안정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사타협의 모델을 제시 및 홍보

○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차별금지
- 기업별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에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철폐가 개혁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및 직무급 전환방안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